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시행
농식품 수출 확대 보완대책

거시경제 동향

2012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기획 정보

세계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7대 요인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1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시행

※ 본 자료는 6월 1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첫 걸음을 내딛다」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개요

- 농업부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농업탄소상쇄 시범사업'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가 최종 선정
- 농림수산물식품부(사업총괄)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사업운영)은 올해 각각 5건 이상의 농업탄소상쇄모델과 저탄소농산물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참여 신청자 모집

□ 농업탄소상쇄 시범사업

- 농업탄소상쇄 시범사업은 녹색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을 수행한 농업경영체에게 감축량에 상당하는 크레디트를 제공하고, 이를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
- 금번 사업에는 지열히트펌프 활용, 녹색마을 조성, 발전폐열 활용, 목재펠릿 이용, 화학비료 절감(녹비재배) 등 5개 탄소상쇄모델에 대해 총 19개 농업경영체가 참여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1년간 녹색기술을 활용한 탄소 감축 활동 및 모니터링 실시
 - 이후 탄소 감축량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검·인증('13.11월)절차를 거친 후, 탄소 감축 인증서('13.12월)를 부여
 -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는 사업계획서 작성, 감축활동 모니터링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과 검·인증 비용이 지원될 예정

□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

- 녹색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탄소배출을 감축시킨 우리 농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고, 유통·소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
 - ※ 축산물은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 분석 등이 이루어진 이후 시행('14년 이후)
- 이번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 선정된 녹색농업기술을 적용**할 경우 관행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보다 **화학비료는 20% 이상, 난방 에너지는 50% 이상 사용이 절감**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는 탄소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 비용 및 검증비용 등이 지원

<참고> 외국의 탄소표시제

구 분	영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	일본
제 도 명	Carbon reduction label	Indice carbon	Climatop	Climate conscious carbon label	Carbon Footprint of Products
시행연도	2008년	2008년	2008년	2008년	2009년
마 크					
농 축 산 물 인증 현황	-	계란	아스파라거스	-	쌀, 토마토 등 6품목

- 주 1) Carbon Score(라벨에 탄소배출량을 표시; 영국·일본)
 2) Low-Carbon Seal(동일 제품군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부여; 스위스)
 3) Carbon Rating(제품 간 비교 가능하도록 상대적 등급을 표시; 미국)

주요 농정 이슈_2

농식품 수출 확대 보완대책

※ 본 자료는 6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2년 농식품 수출 증대에 총력-농식품 수출 확대 보완대책 마련-」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기본물류비 지원 확대

- 전략품목 확대에 따른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 상향 조정**
 - 기존 **25개 수출 전략품목**에 백합·국화·닭고기·오리고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여 수출 전략품목을 **29개 품목으로 확대**
 - **추가 선정된 4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8% → 10%로 상향 조정**
 - ※ 기존품목: 인삼, 김치, 파프리카, 배, 버섯, 장미, 딸기, 사과, 토마토, 단감, 유자차, 막걸리, 조제분유, 소스류 등

○ 수출물류비 지원제외 품목 기준 완화

- 수출물류비 지원제외 품목 기준을 연간 수출금액 **20만 불 → 5만 불로 하향 조정**('11년 수출실적 기준)
 - ※ 지원 대상 품목에 추가 선정됨에 따라 기존 0% → 8%를 지원

□ 인센티브 지원 확대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략시장 인센티브 지원 확대
 - 신규시장 개척 시 인센티브 지원 비율을 **현행 5% → 7%로 상향 조정**
 - 대상 품목 및 국가 기준은 현행 유지
 - ※ 품목기준: 수출전략 품목 중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품목
 - ※ 국가기준: 해당 품목의 연간 수출액이 10백만 불 이상인 국가 및 품목의 국별 수출비중이 20% 이상인 국가 제외, 성장이 기대되는 주 수출국 2개 국가 선정(품목별 수출협의회 등 업계의견 수렴)

 지자체 수출물류비 지원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 기본물류비(25% 한도) 지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지역여건에 맞는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총액한도 예외)
- (예시) 수출시기(비수기)에 따른 차등지원, 수출 출하창구 단일화 여부, 신시장 개척 인센티브 등
 - ※ 지자체별 자체 계획에 따라 대상 품목 및 지원기준 등을 설정하되, 지원 비율은 각각 표준물류비의 5% 이내로 정함.

📄 특별 판촉·홍보 강화

○ 하반기 해외 특별판촉 및 홍보 추진

- 한-미 FTA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H-Mart 등 미국 대형 유통매장에 특별 판촉 개최
- 중국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타오바오, 1호점)과 연계 판촉 개최
- 신시장인 마카오에서도 현지 최대 유통업체의 Royal Supermarket과 연계한 한국 가공식품 판촉전 개최

거시경제 동향

2012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 본 자료는 6월 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실질 국내총생산과 지출

○ 2012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9% 성장

○ 경제활동별

- **농림어업은 전기대비 5.6% 감소**(전년 동기대비 1.2% 증가)
 - ※ **농업은 채소 등 재배업 생산의 부진으로 5.7% 감소**
 - ※ 어업은 오징어, 김 등의 어획량이 늘어 0.2% 증가
- 제조업은 전기전자기기, 운송장비 등이 늘어나 전기대비 2.0% 성장
- 건설업은 주거용건물 및 토목건설이 부진하여 전기대비 1.7% 감소
-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등이 늘어나면서 전기대비 1.1% 증가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2005년 연쇄가격 기준) >

구 분	2010				2011p				2012p	
	1/4	2/4	3/4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GDP)	2.2 (8.7)	1.4 (7.6)	0.7 (4.5)	0.6 (4.9)	1.3 (4.2)	0.8 (3.5)	0.8 (3.6)	0.3 (3.3)	0.9	(2.8)
제조업	4.2	3.7	2.1	0.5	3.3	1.2	1.1	-0.3	2.0	(4.1)
건설업	0.5	-0.7	-1.8	-2.6	-4.3	1.8	2.8	-0.2	-1.7	(2.3)
서비스업 ¹⁾	1.7	0.3	0.4	1.0	1.0	0.3	0.4	0.7	1.1	(2.5)

주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포함

2) ()내는 원계열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지출항목별

- 민간소비는 준내구재 지출이 부진한 반면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여 1.0% 증가

-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운송장비 등이 늘어 10.3% 증가
- 건설투자는 주거용건물과 토목건설이 부진함에 따라 1.2% 감소
- 재화수출은 자동차,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4.2% 증가
- 재화수입은 일반기계, 금속제품 등이 늘어나 4.0% 증가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2005년 연쇄가격 기준) >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구 분	2010				2011p				2012p
	1/4	2/4	3/4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2.2	1.4	0.7	0.6	1.3	0.8	0.8	0.3	0.9 (2.8)
(GDP)	(8.7)	(7.6)	(4.5)	(4.9)	(4.2)	(3.5)	(3.6)	(3.3)	
민 간 소 비	0.7	0.7	1.2	0.4	0.6	0.8	0.2	-0.4	1.0 (1.6)
정 부 소 비	3.0	0.3	-0.2	0.5	0.7	0.8	1.2	-0.8	3.4 (4.7)
설 비 투 자	4.4	7.3	4.6	-0.2	-1.6	4.7	-1.8	-4.3	10.3 (8.6)
건 설 투 자	1.0	-4.0	-0.9	-1.9	-4.4	3.5	-0.5	0.1	-1.2 (1.5)
재 고 증 감1)	1.9	-0.9	-0.1	0.0	1.0	-0.1	-0.2	0.8	-0.6 (0.0)
재 화 수 출2)	3.2	7.3	2.6	3.2	4.1	0.4	2.1	-2.7	4.2 (4.0)
재 화 수 입2)	5.3	6.2	3.4	0.4	3.2	2.7	1.4	-3.6	4.0 (4.6)

주 1)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기준(%p)

2)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3) ()내는 원계열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국민총소득

○ 2012년 1/4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0.6% 증가

-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4% 늘어났으며,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 흑자 규모가 확대

○ 2012년 1/4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늘어났으나, 실질 무역 손실 규모가 확대되어 전기보다 낮은 0.2% 증가

○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대비 1.4% 상승

- 내수(재고 제외)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대비 3.4% 상승
- 수출 및 수입 디플레이터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2.4% 및 4.1% 상승

기획 정보

세계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7대 요인

※ 본 자료는 5월 21일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한 「세계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7대 요인」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문제 제기

○ 세계경제는 '10년 큰 폭 반등 이후 **신흥국 주도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금년 초 경기전망이 다소 상향되었으나, **최근의 경기지표를 보면 여전히 불안한 회복세** 전개

○ 금년 초 예상보다 건조한 성장세를 보였던 **주요국 경제도 최근 들어서는 재차 둔화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음.

- 미국, 유럽 경제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BRICs 국가 중 러시아를 제외한 **중국, 인도, 브라질도 경기 회복 더디**

○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건조한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 점점 필요 **7대 원인으로**,

- ① 세계 고용시장 부진, ② 주요국 주택 시장 침체, ③ 유럽 재정위기,
- ④ 주요국 정부지출 위축, ⑤ 은행·가계의 디레버리징, ⑥ 고유가,
- ⑦ 주요국 공조 약화

□ 7대 요인별 동향 및 평가

1. 세계 고용시장 부진

○ (동향) 고용 시장은 불확실한 경제전망과 구조적 문제로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으로 미 복귀된 상태**

- 주요국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미국 '08.1월 5.0% → 최근 8.1%, EU 6.9% → 10.2%) 고용 확대폭은 미미함. 장기실업(미국 구직자 중 장기 실업자 41%) 및 청년실업(선진국 평균 17%, EU 22%)도 확대

- 고용시장 부진 배경은 ① 불확실한 경기전망 하에서 고용 기피, ② 기업의 비용절감 통한 이익창출, ③ 재정긴축 우선에 따른 고용창출 미진, ④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미스매치 등임.

○ (평가) **글로벌 경기가 기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고용시장만의 뚜렷한 회복 가능성은 낮을 듯**

※ 국제노동기구(ILO): 세계 노동시장 '16년 말까지 회복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맥킨지(McKinsey): 금융위기 때 잃었던 일자리 회복에 45개월 소요 전망

2. 주요국 주택시장 침체

○ (동향) **미국**은 신규주택 건설 등 **주택시장 바닥 다지기가 진행** 중이며, **유럽·아시아 등 기타 지역은 침체** 지속

-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일부 개선 신호(주택건설 착공, 신규주택건설 등)도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바닥 수준에서 횡보
- **유럽은 재정 불안국 중심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아시아 중 일본은 12% 하락, 중국 홍콩 등은 작년까지 호황 지속 후 최근 약세
- 주택시장 침체 지속 배경은 ① 주택시장 장기호황 여파(고평가 인식), ② 여전히 많은 공급물량, ③ 불확실한 경기전망에 따른 수요 위축 등

○ (평가) **주택 경기**가 일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는 조짐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경기전망이 불확실하고, 수급 불균형 지속 등을 감안해 볼 때 **본격적인 회복 전환에는 한계**

3. 유럽 재정위기

○ (동향) **유럽 재정위기**는 **아직까지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추가적인 위험요인 산적**

- 기 구제금융 3국도 여전히 위기를 벗어나지 못함. **그리스**는 2차례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로존 탈퇴 우려**까지 가세. **포르투갈·아일랜드**는 추가 구제금융 가능성도 제기

- 기타 국가들도 불안감 팽배. **스페인·이탈리아**도 경기침체, 재정개혁 일부 후퇴, 은행권 불안 등으로 구제금융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지표들도 악화

-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배경은 ① 방만한 재정 운영 후유증, ② 재정긴축과 경기둔화의 악순환, ③ 주요국들의 공조 대응 미흡, ④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심각한 갈등 등

○ (평가) **유럽 재정위기**는 재정 기반 정상화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갈등, 경기 위축으로 인한 악순환 등이 겹쳐 **근본적인 해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가능성 높아**

4. 주요국 정부지출 위축

○ (동향) **그간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인해 선진국의 추가지출 여력이** 소진되었음. 상대적으로 신흥국은 재정지출 여력 양호

- **선진국들의 정부부채**('07년 75% → 금년 104%(e)) 및 **재정적자**('07년 -1.2% → 금년 -5.7%(e))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

·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재정긴축 정책에 초점을 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보다 양적완화에 치중**함.

· IMF는 선진국들의 정부지출 증가율이 '10년 1.2% → '11년 0.0%로 정체된 것으로 추정

- 단, **신흥국은 재정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 중국은 필요 시 추가부양 가능성 있으며 브라질 정부는 올해 경기부양 강화 천명
- 정부지출 위축 배경은 ① '08~'10년 중 재정지출 급증의 후유증, ② 주요국의 재정건전화 노력, ③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 부족 등

○ (평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지출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임. 글로벌 경기둔화 재개 시 민간의 경기회복 기조도 강하지 않아 전체적인 성장 동력의 부재 가능성도 상존

5. 선진국 은행과 가계의 디레버리징

- (동향) 선진국 은행 및 가계를 중심으로 대출 축소 등 디레버리징 진행
 - 주요 선진국 은행의 대출 축소(미국 '08.9~'11년 대출잔액 Δ 5%, EU 대출증가율 위기 전후 연 12% $\rightarrow$ 2%), 자산 매각 등으로 은행 레버리지 비율 감소(미국 '08년 고점 27% $\rightarrow$ '11년 말 15%, 유로존 35% $\rightarrow$ 24%)
 - 미국의 경우, 가계부채는 '08년 고점 이후 4% 감소했으며 유럽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이 위기 이전 연 9%에서 2% 내외로 큰 폭 둔화
 - 은행·가계의 디레버리징 배경은 ① 경기둔화 전망 하 대출·소비 축소, ② 과도했던 자산·부채 축적의 정상화, ③ 자본 확충 규제 강화(유럽 자본 확충 강화, 바젤III 시행 준비) 등
- (평가) 장기간의 부채 축적, 주요 선진국 양적완화정책 강화(ECB LTRO 등) 등으로 앞으로도 은행·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장기간 진행될 전망. 이는 세계경제 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6.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

- (동향) 국제유가는 글로벌 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고수준 지속
 -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는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13개월 이상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등 고수준을 유지함.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약세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특히, 지난해 이후 이란 핵사태 관련 경제제재, 원유수출 중단 및 군사적 충돌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의 상방압력이 큰 상황임.
 - 고유가 지속 배경은 ① 신흥국 주도의 견조한 수요 ② 원유생산 증가세 둔화(비OPEC 중심) ③ 중동 불안 잠재 ④ 낮은 수준의 채고 등
- (평가)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국제유가 고수준 상황 지속될 가능성 높아

7. 주요국의 정책공조 약화

- (동향) 각국의 경제여건 등에 따라 주요국 공조 수준이 크게 변화함. 최근에는 국가별 상황인식 차이, 국내 갈등 고조 등으로 '08~'09년에 비해 공조 수준이 약화됨.
 - 최근 동일 경제권역 간(EU·유로존), 상이한 권역 간(미국·EU), 선진·신흥국간 입장 차이 등으로 국가 간의 정책 공조가 적시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발생
 - 특히, 유럽에서는 다수 이슈(긴축 vs 성장, 재정협약, 구제금융 찬반, 금융안전망 확대, 금융규제)에 대한 불화로 재정위기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적시 대응에 애로
 - 국가 간 협력이 부진한 배경은 ① 각국의 상이한 경제상황(경기, 인플레이, 은행권 상황), ② 국가 내 정책갈등(여야, 국민 vs 정부), ③ 국가 간 주도권 경쟁 등
- (평가) 금융 불안이 다시 확대될 경우, 국가 간 정책공조 강화 가능성이 있으나, 주요국의 리더십이 종전보다 약할 것으로 예상

□ 종합평가

- 세계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7가지 요인들을 점검해본 결과 이들 요인 모두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 이는 부채, 지출 등 그간의 과도한 팽창에 따른 문제점들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에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향후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각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제약하기 때문임.
- 다만, 이들 7가지 요인 중 핵심 키워드인 “주요국의 대응 및 유럽 재정 위기의 향방”에 따라 큰 폭의 상·하방 위험이 병존
- 이에 따라 향후 세계경제 성장세가 불안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감안해 경제 및 기업운영 전략을 조정하되,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

※ 본 자료는 6월 4일~8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수박·참외, 이달까지 ‘고공영진’

- 수박·참외, 더워진 날씨로 인해 식자재와 가정용소비 증가로 **가격 상승세**. 가락시장, 5.31일 수박 상품 8kg 가격 1만 6,000원 선으로 평년에 비해 약 20% ↑, 참외도 상품 10kg 기준 3만 1,000원으로 평년보다 약 5,000원 ↑. **▲수박, 출하 지난해 절반 수준**…평년 900톤에 육박하던 가락시장 수박 반입량은 올해 저온현상과 큰 일교차로 인해 산지작황 저조. **▲참외, 산지작황 저조**…과비대시기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산지작황 저조로 반입량이 평년보다 20% 가량 감소. **반입량 대비 소비 꾸준히 늘어 이달까지 강세 이어갈 전망**

자료: 농수축산신문(2012.6.5).

□ 미국산 쇠고기 박스 열어보니 특정위험물질(SRM) 없었다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4.27일~5월 말까지 549건 1만193톤 검사(검사 50%로 확대하는 등)로 검역을 강화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 특정위험물질(SRM)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처럼 검역 조치를 강화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수입제품 중에 혹시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개봉검사 확대 실시. 검역강화기간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물량은 50만6,778박스로 그 중 25만4,448박스 개봉검사 통해 유통기한 경과 1, 이물발견 2, 변질 18 등 불합격된 제품은 21박스에 불과

자료: 농축유통신문(2012.6.4).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2012.6.1) 「특정위험물질(SRM) 전혀 발견되지 않아」

□ 2014년 구제역 행정국 인증 추진

- 농식품부, **2014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청정국 인증 획득** 위해 구제역 재발방지 및 청정화 대책 수립·시행.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인증 조건…2년간 구제역 미발생, 최종 1년 간 바이러스 순환 없음 확인, 방어면역 수준(항체양성률) 80% 이상 유지. 우리나라는 **‘11.4.21일 이후 1년간 27건의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위해**…백신접종 시 형성되는 항체(SP항체) 검사를 3만 1,000(‘11년)→8만7,000(‘12년)마리로 확대, OIE기준에 따라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 판정기준 강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경력 확인을 위한 NSP항체 검사를 소·돼지 등 가축+멧돼지 등 야생동물까지 확대, 검사물량도 15만7,000(‘11년)→16만(‘12년) 건으로 증대, NSP항체 양성축 발견 시 전 마릿수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특히 과거 3개월간 평균 항체양성률 80% 미만인 시·군에 대해선 해당 축종에 대한 일제 조사 실시, 농가 실명제 공무원을 통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예방접종 소홀 사례를 근절해 나갈 계획

※ 구제역 혈청검사(SP항체) / 구제역 야외바이러스(NSP항체)

자료: 농수축산신문(2012.6.5).

□ GMO표시 확대 목소리 커진다

- 2008년 도입하려다 식품업계 등의 강력한 반발로 시행되지 못한 **GMO표시 확대 재추진**. 그동안 **3% 이하 GMO가 섞여있었거나 최종 제품에 GMO성분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돼** 식용유, 간장, 전분당, 설탕, 주류 등은 GMO표시 대상에서 제외. 하지만 **GMO표시가 확대되면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GMO표시 의무화, GMO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무유전자재조합(GMO-Free) 등으로 표시**. **▲식품업계 반대 입장**…GMO표시제로 인해 물가가 상승해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 식품산업 후퇴하는 부정적인 전망. 2010농식품 안전백서(‘11.9월), ‘10년 수입된 대두와 옥수수 342만 6,000톤 가운데 절반을 넘는 204만5,000톤(59.7%)이 GMO농산물. **▲대두**…수입된 120만5,000톤의 물량 중 **98만 톤(81.3%)이 GMO**, **▲옥수수**…222만1,000톤 중 **106만5,000톤(47.9%)이 GMO**. 수입된 GMO대두는 주로 식용유 등 착유용에, GMO옥수수는 전분이나 당, 사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6.7).

□ 종자산업 육성정책 추진 탄력

- 종자산업법 개정법·식물신품종보호법 '12.6.1일 공포. 이로써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간육종연구단지(Seed Villet) 조성 등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활성화 전망.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자기업 육성·지원, 종자 수출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종자기술연구단지',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법률' 주요내용...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국제협약으로 인해 '12.1월부터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해 보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식물신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 품종보호권 침해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조정해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강화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6.4).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2012.5.30) 「종자산업 육성과 육종가 권리 강화 기대」

□ [사설] 농업용수 부족...대체 수자원 개발 시급하다

-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 59.9%(12.6.4일 집계)로 지난해의 78.6%에 비해 크게 밀돌고 평년(67.5%)보다도 낮아 농업용수를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막바지 모내기는 물론 발작물 피해 우려
- 농촌진흥청, 최근 발표한 '블루골드, 물 이야기-문명에서 농업용수까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농업용수는 작년부터 필요한 수량(179억t)보다 30억t 이상 부족하다고 예측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리나라를 OECD 국가 중 '물 스트레스'가 심한 국가로 분류
- 현재로서는 많은 비용과 생태계 문제를 불러올 댐건설보다는 농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경제성도 높은 빗물 가두기 및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저수지 시설의 현대화 필요

자료: 농민신문(2012.6.8)

□ [사설] 학교가 줄면 농어촌도 붕괴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농어촌 학생의 학교선택 용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 한다는 명분으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추진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30일까지 의견수렴 마쳐 농어민·교육계 반발
- (개정안) ▲농산어촌지역 소규모학교 및 구도심 지역의 학생들이 인근의 적정규모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최소 적정규모를 초·중학교의 경우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 ▲학급당 학생 수는 최소 20명 이상 되도록 규정
 - 이번 개정안 시행되면 농촌 젊은 층의 이탈 가속화 전망
- 통폐합 대상(교육계 분석)
 - 학급당 20명 이하 학생 수 규모의 학교는 3,138개, 전체 초·중등학교 1만 1,331개 가운데 27.7%
 - 통폐합 대상의 86.3%에 이르는 2,708개교가 읍면 및 도서벽지
 - 7개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 지역의 초등학교는 무려 62.8%에 해당하는 1,870개 학교
- 소규모 학교야말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에 맞춰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6.4)

연구 지원 정보

2011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

※ 본 자료는 5월 3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임.

□ 생산비

- **비육돈 생산비**는 사료비 증가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2.0% 증가**

※ 비육돈 생산비(천 원/100kg): ('10) 248 → ('11) 302 (22.0%)

- **송아지, 한우비육우, 우유, 계란 생산비도 사료비 등이 늘어나 증가**

※ 송아지 생산비(천 원/마리): ('10) 2,692 → ('11) 3,061 (13.7%)

※ 한우비육우 생산비(천 원/600kg): ('10) 5,180 → ('11) 5,691 (9.9%)

※ 우유 생산비(원/ℓ): ('10) 641 → ('11) 718 (12.0%)

※ 계란 생산비(원/10개): ('10) 1,132 → ('11) 1,267 (11.9%)

< 축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현황 >

구 분	'09		'10(A)		'11(B)		전 년 대 비			
	경영비	생산비	경영비	생산비	경영비	생산비	증감(B-A)		증감률(%)	
							경영비	생산비	경영비	생산비
송아지 (천 원/마리)	1,689	2,737	1,664	2,692	1,964	3,061	300	369	18.0	13.7
한우비육우 (천 원/600kg)	4,383	5,416	4,143	5,180	4,554	5,691	411	511	9.9	9.9
육 우 (천 원/600kg)	3,033	3,670	3,026	3,768	3,209	4,021	183	253	6.0	6.7
우 유 (원/ℓ)	512	614	525	641	596	718	71	77	13.5	12.0
비육돈 (천 원/100kg)	224	239	232	248	283	302	51	54	22.0	21.8
계 란 (원/10개)	1,132	1,187	1,081	1,132	1,212	1,267	131	135	12.1	11.9
육 계 (원/kg)	1,255	1,311	1,292	1,342	1,317	1,377	25	35	1.9	2.6

주: 생산비 = 가축비 · 사료비 등 제비용 + (자가노력비 + 자본이자), 경영비 = 생산비 - (자가노력비 + 자본이자)

□ 순수익

-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육우 순수익은 소값 하락 등에 따라 조수입이 줄어 전년보다 감소**

※ 한우번식우 마리당 순수익은 -1,071천 원

→ 송아지 산지가격(4~5개월, 암): ('10) 2,174 → ('11) 1,449천 원/마리 (-33.3%)

※ 한우비육우 마리당 순수익은 -1,166천 원

→ 한우 경락가격(원/거세우 지육 kg): ('10) 16,546 → ('11) 13,550 (-18.1%)

※ 육우 마리당 순수익은 -1,506천 원

→ 육우 경락가격(원/지육 kg): ('10) 9,752 → ('11) 7,317 (-25.0%)

- **젖소 순수익은 전년보다 16.7% 감소한 1,508천 원**

- 이는 원유가격 상승에 따라 조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사료비 등 사육비 증가폭이 컸기 때문

- **비육돈 순수익은 14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 이는 사료비 등 사육비가 증가하였으나, 조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 전년보다 증가했기 때문

< 축산물 수익성 현황 >

구 분	'09			'10			'11		
	조수입	소 득	순수익	조수입	소 득	순수익	조수입	소 득	순수익
한우번식우 (천 원/마리)	1,595	264	-531	1,731	427	-365	1,175	-276	-1,071
한우비육우 (천 원/마리)	6,245	1,348	198	6,806	1,948	739	5,658	189	-1,166
육 우 (천 원/마리)	3,636	75	-670	4,074	600	-251	3,166	-638	-1,506
젖 소 (천 원/마리)	7,282	2,680	1,796	7,398	2,772	1,810	7,748	2,529	1,508
비육돈 (천 원/마리)	357	105	88	323	58	40	483	165	143
산란계 (원/마리)	31,857	-847	-2,369	28,627	-2,618	-4,036	34,008	348	-1,101
육 계 (원/마리)	2,209	413	333	2,255	392	322	2,142	231	144

주: 소득 = 조수입 - 경영비, 순수익 = 조수입 - 생산비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